

8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 ■ 건전음주캠페인 실시 “1/2잔으로 건전음주 실천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젊은 연령층의 음주율 감소를 위해 2010년 “1/2잔 건전음주캠페인”을 실시한다.
 - “1/2잔 건전음주캠페인”은 실제 소주잔의 절반이 유리로 채워져 있는 1/2잔을 제작해 음주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기존의 “절주하자”는 단순한 캠페인메시지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 이번 캠페인은 전국 대학가 주변 주류 판매업소 600곳을 중심으로 “1/2잔”을 배포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 업소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더 이상 잘못된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습관을 가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캠페인에 대해 “우리나라 성인 음주자 3명 중 1명은 고위험 음주자이고, 음주로 인한 사망과 질병,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즉석에서 절제할 수 있는 1/2잔을 개발해 건전음주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특히,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연령층의 음주폐해가 심각해 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가 지원하고 있는 전국 60개 대학 절주동아리가 직접 1/2잔 배포에 앞장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 ○○대학교 절주동아리 회장은 이번 캠페인에 대해 “대학 내에는 매년 술로 인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1/2잔이 알려진다면 많은 학생들이 절주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업소배

- 포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전음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현수막 등을 설치해 1/2잔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대학교 절주동아리 회장은 “절주와 금주는 다른 개념이다. 1/2잔은 술을 절제하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건전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최대한 홍보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대학 절주동아리 활동: 대학내 축제행사시 대학생 절주교육 및 홍보, 주류업체의 주류 판촉 및 후원행위 모니터링,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한 대학가 주변 불법 주류 판매 감시 활동 등

- 보건복지부는 이번 캠페인과 아울러 CATV 절주광고 방영, ‘절주송’을 만들어 홍대 등 대학로에서 거리공연을 진행, 관련 UCC바이럴 영상제작 및 온라인 배포를 통하여 절주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 관련 시민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일반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8월부터 폭염피해 응급진료사례 조사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8월부터 9월말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폭염에 따른 응급진료 사례를 보고받아 폭염피해 현황을 파악함
- 폭염 피해는 대부분 일사병이나 탈수와 같이 경미한 신체증상을 초래하지만, 폭염에 취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체온조절이 안 되는 열사병의 경우는 응급진료가 필요하므로 응급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폭염피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전국 460개 응급의료기관이 온열질환으로 확진 또는 의심되는 사례를 일별로 집계하여 다음날 보고하고 있음
 - ※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2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28개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이미 알려진 취약인구가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지난 6월 「폭염대비 건강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 폭염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현황을 주간단위로 매주 초에 알리고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1년, 주요 노후수단으로 관심 높아져

- 국민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공적연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연금간 이동자의 43.4%가 향후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같은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1주년(8.7)을 맞아 연금간 이동자 2천명 및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 연금간 이동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동자의 38.2%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공적연금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조사대상 전체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최우선 대책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 제도시행 1주년인 현재 이미 연계신청을 했거나 향후 신청하겠다는 응답자도 44.7%로, 신청하지 않겠다는 20.7%보다 2배이상 높았다.
- 또한, 응답자의 51.2%가 ‘연계제도가 노후생활대책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16.1%에 그쳐 연계제도가 효과적인 노후대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86.6%가 노후준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연계제도 인지율도 높아져, 노후 준비과정과 연계제도 관심도가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 * 연계제도 인식률: 20대(41%)→30대(53%)→40대(72.5%)→50대(62.2%)
- 한편, 연금간 이동자 중 절반가량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안내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지여부 조사결과, ‘제도를 알고 있다, 들은 적 있다’라는 응답이 50.3%에 그쳐, 나머지 절반정도는 연계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본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연계를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 중 ‘연계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780명 중 380명(48.7%)이 ‘연계제도를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연금간 이동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4~50대의 경우는 70%가 연계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사회초년기인 20대의 경우 41%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젊은층에 대한 홍보가 더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향후 연금간 이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 안내와 함께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안내자료 발송위주의 홍보방식에서 탈피하여 TV, 라디오, 시내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일반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공적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 대책이다(38.5%)’,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알고 있다(13.4%)’, ‘향후 연계제도를 신청하겠다(54.5%)’, ‘연계제도가 노후생활대책에 도움이 된다(56.3%)’ 로 나타났다
- 복지부 이상희 공적연금연계팀장은 “연금간 이동자가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연금 사각지대 줄이기를 위한 충실한 역할을 하게 직업이동시 반드시 안내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방식도 다양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설문으로 제도 인식정도 및 향후 이용의사와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세한 조사결과는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조기집행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노인일 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노인 4고(苦; 건강, 빈곤, 역할상실, 고독)’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04년 3만5천개를 시작으로 '10년 현재 18만6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 특히, 금년에는 6월말 기준으로 연간 목표대비 62.4%의 사업 추진율을 보여 예산 조기집행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 수행일자리 수(개): 사업 참여인원을 일자리 수(월20만원, 7개월 기준)로 환산
 - * 추진율(%): 목표사업량 대비 수행일자리 사업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성별 분석 결과 남성이 79,623명(36.5%), 여성이 138,299명(63.5%)이었으며,
- 연령별로는 70~74세가 80,442명(36.9%)으로 가장 많고, 65~69세 60,326명(27.7%), 75~79세 47,717명(2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세 이상 노인도 20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방향은 ‘공공일 자리의 내실화와 민간일 자리의 생산적 증대’ 로,
- 공공분야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격향상, 지역발전 등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 압류물품 위조상표 제거사업(보건복지부 · 관세청 · 굿네이버스 협약,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 기증하는 사업), 아동안전보호, 문화재해설 및 보호,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노노케어 사업 등

- 민간분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성과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편성하고 있다.
 - 친환경 식당·도시락 등의 음식업, 실버바리스타 양성 및 실버카페 운영 등
- 특히, 정부예산 투입 없이 민간기업(단체)과의 상호협력으로 추진되는 자체개발일자리는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 최근에는 시니어스태프(보건복지부·(주)보광훼미리마트 협약), 문화재 발굴 등 노인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생활패턴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였고, 빈곤율이 약 6.1%p 감소하고, 1인당 연간 약 18만원의 의료비가 절감되는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서울대 산학협력단(이석원 교수 등), 연구기간: '08.10.~'09.3.
- 또한, 노인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하는 노인의 성실성 및 헌신 등 심리적 태도(48.3%)와 고객관리 기술, 대인기술 등의 인간관계 관리측면(17.2%) 등을 이유로 근로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기간 : '09.9.~'09.11.
 -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근로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통해 민간시장에서의 노인 일자리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보여준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 및 내실화하기 위하여
 -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전략아이템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1지역 1특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 시장에서 자생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개발·모델화 등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또한 하반기에는 정책수요자 지향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참여노인, 일자리 전달체계, 기업 등 정책 환경과의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노인일자리 서포터즈”를 구성·운영 할 예정이다.
 - * “노인일자리 서포터즈”는 교육수준이 높고 경험이 많은 은퇴자들이 특화된 경륜을 활용하여 시장 내 일자리 수요를 고려한 업종을 제안하고 온-오프라인(On-Off line) 상의 노인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담당

9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대학시간강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자격변동

- 9월 1일부터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1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10만명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가입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현행 월 80시간)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전국의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 또한,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 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10년 상반기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8월 17일(화) 보건복지부가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0년 상반기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에 조사된 보건복지 관련 산업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 상 8개 대분류 업종에 포함된 22개 소분류, 57개 세세분류 업종으로,
 - 병·의원, 공중보건의료업(보건소, 보건지소 등) 등 보건의료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6월 기준 보건복지 관련 산업 취업자 수는 1,911천명으로 2009

년 12월 대비 165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09.12~'10.6) 타분야 취업자 증감분(천명)

- 제조업 +145, 건설업 +1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0 ('10.7월, 통계청)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산업 취업자 수 증가분 1,051천명의 15.7%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금년 상반기 중 일자리 증가분의 1/6이 보건복지 관련 산업에서 창출된 것이다.

* 보건복지 관련 산업 취업자 수(천명): ('09.12) 1,746 → ('10.6) 1,911 ('10.8월 한국통계진흥원)

* 전체 취업자 수(천명): ('09.12) 23,229 → ('10.6) 24,280 ('10.7월 통계청)

□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 2010년 6월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는 1,123천명으로 2009년 12월 1,011천명 대비 112천명 증가하여, 전체 보건복지 관련 산업 취업자 증가분 165천명의 67.9%를 차지하였다.

○ 이밖에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도매 및 소매업”(195천명, +21천명), 미용·피부미용 등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95천명, +28천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 국민연금 늦게 받으면 1년마다 7.2%씩 더 받는다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령근로를 유인하고자 마련되었다.

*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기한 1년 당 6%의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으로, 현재 소득이 275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감액받고 있는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만 신청가능

□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인력재배치(안) 확정

- 정부는 8.17.(화)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인력규모 및 전환인력 재배치(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 수행 인력은 2,541명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각 공단 기존 직원 중 국민연금공단 712명, 근로복지공단 317명을 선발하며, 나머지 1,512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존 직원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징수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은 각 공단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활용된다.
- 정부는 2008년 8월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키로 결정한 바 있다.
 - 그 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이에 따라 적용기준과 징수방식 등이 달라 업무비효율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 금번 징수업무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유사한 업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비효율이 제거되고 노인장기요양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 신설을 추진하다가 노조의 반발, 초기투자비용 과다 및 조기 안정화 필요 등에 의해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 정부는 그간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위해 법령(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정부는 완벽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각 공단의 우수한 인력재배치안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통합 요건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류호영 국장은 “통합징수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에 앞서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1년 1월부터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욱 깐깐해진 어린이집 평가인증 - 제2차 평가인증 결과 첫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지표를 적용한 평가인증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 이번 발표대상은 2010년 2월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으로 604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통과율 68.4%).
 - 이로써 2010년도 8월 현재까지 전국의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21,006개소(59.1%)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 제1차 평가인증('05~'09)에는 참여한 어린이집의 80.4%가 인증에 통과하던 것에 비하면 인증 통과율이 다소 낮아진 것이다.
 - 이는 2010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평가인증에서 지표를 고도화하고,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73.33→75점)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 다만 제2차 평가인증 시행초기인 만큼 통과율 저하 요인 및 향후 경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올해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외에도,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를 함께 받게 되어 이에 따라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의 자긍심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어린이집은 기존의 인증결과통보서 외에도 '종합평가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인증결과와 개선점 등을 받아볼 수 있어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총 9기에 걸쳐 진행되는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신청증가로 당초 7,400개소에서 1,200개소가 증가한 8,600여 개소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 8월 23일부터는 2005년도에 인증을 받았던 어린이집 550개소에 대한 재인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인증 기준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표준보육과정 교육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설의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005년부터 시행되었던 평가인증(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아이사랑보육포털홈페이지(www.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된 1,439,413원

-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장관 전재희, 이하 중생보)의 심의를 거쳐 2011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 인상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전년(2.75%)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인상 수준이다.

<2010년 및 2011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5.60%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현금급여 기준	2010년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3.28%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써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첫째, 신규로 휴대폰, 가구 집기, 명절 친지방문비 등을 마켓바스켓 품목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 특히, 휴대폰이 국민생활에 필수품으로 되어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원활한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폰이 최저생계비 품목에 포함되었다. 휴대폰은 2004년부터 포함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그동안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았던 품목이다.
- 둘째,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아동 1인의 수련회비를 추가반영(기존 1인→2인)하고, 아동 도서 구입권수를 상향조정(연 2권→연4권) 및 문제집 구입권수를 상향조정(학기당 1권 총 4권→ 학기당 2권 총 8권)하였으며,
- 셋째, 아이들의 성장속도에 부합한 피복비 지원을 위해 아동 의류 품목에 대하여,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하였다.
 - 특히, 내구연수가 6~8년에 이르던 자녀의 잠바·바지 등 의류에 대해 아동의 성장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내구연수를 2년으로 조정하였다.

-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다만, 도입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상대적 빈곤선의 설정 기준(중위소득, 중위 지출 등), 상대적 비율 및 적용 가능한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와같은 권고사항을 의결하였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1년 최저생계비 외에도,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을 결정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 결정 등 다른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정례화하였다.
 - 이는 그간의 최저생계비 인상이 계측년도는 생활실태의 변화를, 비계측년도에는 물가를 반영해온 과거 경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 이번 결정은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심층토론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다만, 물가 변동폭이 예외적으로 클 경우 중생보에서 인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하였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 ① 주거급여에 지역별, 주거형태별 최저주거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및 ② 타법지원액 계산방식의 현실화 방안과 ③ 표준가구 다양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생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년 만에 실시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에 나타난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순조로운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소득층에게까지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